CIA 국장 "보복테러 거의 확실"

■ 선장 잃은 알 카에다 좌초? 피의 보복?

정신적 지주 부재 불구 각국 연계 자생 테러조직 건재

조직의 수장을 잃은 알-카에다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패배자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피의 보복을 감행함으로써 다시 조직의 건재함을 과시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우선 오사마 빈 라덴이 사살됨에 따라 알-카에다가 향후 활동을 전개하는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빈 라덴이 2001년 9·11테러 이후 알-카에다의 테러를 전면에서 지휘해 온 실질적 지도자가 아니라 정신적 지주로서의 상징성이 큰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알-카에다의 '전사'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타격은 상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알-카에다의 주 활동무대였던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알-카에다 세력이 약화하고 있는 가운데 맞이한 빈 라덴의 죽음은 알-카에다에는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 최신호(5/6월호)에 따르면 아프간에서 빈 라덴에게 충성 맹세를 한 핵심 대원은 2001년 200명에서 최근 100여명으로 감소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아프간에 남은 알카에다 대원의 수가 50~100명 혹은 그 이하일 것"이라며 알카에다 세력이 9·11 테러 이후 가장 약화한 상태라고 지난해 6월 밝힌 바 있다.

노르웨이 국방연구소의 토머스 헤그함메르는 로이터통신을 통해 "빈 라덴은 대원 사이에서는 알-카에다 생명선의 상징이자 서방에 대한 도전의 상징이었다"며 "그의 죽음은 대원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알-카에다와 지하드(성전) 운동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빈 라덴의 사망으로 알-카에다의 운명을 예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알-카에다는 상하 수직형 단일 조직이 아닌데다 알-카에다와 연계돼 있거나 추종하는 단체들이 전 세계 70개국에 퍼져 있기 때문에 빈 라덴 개인의 사망이 조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최근 알-카에다 내에서 가장 공격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라비아반도지부(AQAP)의 경우 예멘 시위사태에 따른 혼란을 틈타 다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빈 라덴 사살에 대한 보복 테러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AQAP는 2009년 성탄절 미국행 여객기 폭파를 기도하고 지난해에는 폭탄소포를 이용해 미국행 화물기 폭파를 시도하는 등 자칫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테러를 획책하며 서방 정보당국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재단의 대 테러 전문가 사진 고헬은 "빈 라덴이 죽었어도 국제 테러리즘은 그와 함께 죽지 않았다"며 "그의 이데올로기와 독트린은 여전히 세계 지하디스트 사이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리언 파네타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2일 오사마 빈 라덴을 잃은 알-카에다가 미국을 상대로 거의 확실히 보복을 시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네타 국장은 이날 "테러리스트들은 거의 확실히 그(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시도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단호하고 조금도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과 주한 아랍국가 대사관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이메일이 삼성 캐나다 현지 법인을 통해 접수된 3일 오전 경찰특공대가 폭발물 탐지를 위해 탐지견과 함께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본사 폭파 하겠다"

빈라덴 사망 발표 직후 협박 이메일 발송
아랍 대사관도… 보복테러 우려 기업 비상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으로 알 카에다의 보복 테러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삼성 사옥과 주한 아랍국가 대사관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이메일이 발송돼 경찰이 수색작업을 벌였다.

경찰청 대테러센터에 따르면 "삼성 본사와 주한 터키,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오만, 바레인,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 대사관에 2~6일 폭발물을 설치해 폭파시키겠다"는 내용의 영문 이메일이 2일 삼성 캐나다 현지 법인에 들어왔다.

이메일은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2일 오전 4시 28분(현지 시각) 발송됐고 발신자는 'dilara zahedani'라는 아랍계 이름을 아이디로 썼다.

경찰은 삼성 측의 신고를 받고 3일 오전 7시35분께부터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 타격대 등 60여명과 폭발물 탐지견 6마리를 보내 폭발물 탐지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3시간 넘게 사옥 내 3개 건물 주변과 지하주차장, 상가, 로비 등지를 뒤졌지만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삼성전자 사옥의 보안을 뚫고 폭발물을 설치하기가 쉽지 않지만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들을 철저히 수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발신자가 지목한 아랍국가 대사관 측에 협박 이메일이 발송된 사실을 통보하고 주변 순찰을 강화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메일에 적힌 9개국가 가운데 바레인과 시리아는 국내에 대사관이 없는 점으로 미뤄 계획된 테러의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캐나다 현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주재관 등을 통해 협조할 계획이다. 이건희 회장은 이날 서초사옥에 출근,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

한편, 알카에다의 보복 테러 우려가 커지면서 중동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중동 지역 사업 비중이 큰 건설업계는 아직까지 별다른 위협을 받진 않았지만, 사태 전개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항공업계는 항공 보안등급을 한 단계 상향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알 카에다 '배신자'·사살 특수부대 등 거론

■ 빈 라덴 현상금 287억 누가 받을까

지난 2001년 '9·11 테러'를 주도한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사살되면서 그에게 걸린 현상금이 누구에게 돌아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빈 라덴에게 걸린 현상금은 무려 2700만달러(한화 약 287억 5000만원)로, 미 연방수사국(FBI)의 지명수배자 가운데 가장 높은 액수다.

이 가운데 2500만달러는 미 국무부가 내건 것이며, 200만달러는 이와 별도로 항공운송협회(ATA), 항공조종사협회(APA) 등 민간단체에서 추가한 것으로, 빈 라덴의 체포나 기소에 결정적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주도록 돼 있다.

아직 현상금 주인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상태이나 일부 현지 언론은 빈 라덴을 사살한 미군 특수부대가 특정지점을 겨냥한 점으로 미뤄 누군가 알-카에다를 배신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빈 라덴을 사살한 특수부대나, 위치를 찾고 사살 작전에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파키스탄 당국에 돌아갈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편 FBI는 홈페이지에 실린 지명수배 명단에서 빈 라덴의 사진에 '사망'이라는 표시를 했다.

이에 따라 '최고 몸값'의 자리에는 알-카에다의 공동설립자이자 빈 라덴의 '오른팔'로 알려져 있는 아이만 알-자와히리(2500만달러)가 올랐으며, 역시 알-카에다 조직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는 사이프 알-아델과 파줄 압둘라 모하메드가 각각 500만달러의 현상금으로 2,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예멘계 미국인 성직자 안와르 알-올라키와 미국 출신으로 알-카에다의 '미국 대변인'으로 불리는 아담 야히예 가단 등도 주요 수배자 명단에 올라있다. /연합뉴스

내년 서울 핵안보회의 다시 주목

알 카에다 '핵테러' 보복 가능성… 한미 협의 착수

9·11 테러의 배후인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군에 의해 사살된 가운데 내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쏠리는 관심도가 급고조되고 있다.

정신적 구심력을 상실한 알 카에다 조직의 '핵테러'를 통한 보복 가능성이 대두하면서 국제사회의 공동대처 노력이 긴요해졌기 때문이다.

핵물질이 알 카에다 손에 넘어가 무차별적 테러가 저질러질 경우 그 피해와 후폭풍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커져가고 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관측이다.

사실 미국의 '핵안보' 구상은 애초 빈 라덴을 겨냥한 것이었다. 9·11 테러가 발생한 이후 알 카에다가 핵물질을 이용해 테러를 하거나 핵발전소와 핵관련 시설을 공격하는 것이 미국과 서방세계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였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9·11 테러 이후 줄곧 '핵테러'를 최대 국제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해왔고 이 같은 노력이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구상으로 결실을 보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4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주창한 프라하 연설에서 "4년내 모든 취약 핵물질의 안보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이 같은 핵테러 우려 속에서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는 핵안보 문제에 대처하는 국제사회의 명실상부한 메커니즘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이 3일 오전 서울에서 개최하는 핵안보정상회의 관련 협의는 시의성과 의미가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전년도 주최국인 미국과 내년 주최국인 한국이 핵안보정상회의의 새로운 밑그림을 설계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플리바게닝' 도입 국무회의서 제동

인권침해 소지 심의 유보
김총리 "숙려기간 갖고 검토"

범죄 사건 규명에 협조한 범죄자에 대해 형을 감면하거나 기소를 면제해 주는 이른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 성격의 법안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에서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3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소추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를 유보키로 했다고 유성식 총리실 공보실장이 전했다.

개정안에는 여러 사람이 관련된 범죄의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범죄에 대해 진술해 사건의 규명, 범인의 체포 등에 기여한 이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패·강력·마약·테러범죄 등 은밀하게 이뤄지는 범죄와 관련해 사건 규명에 없어서 안되는 진술로 인정될 경우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일부 국무위원이 "수사 편의적 측면이 강조됐다"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통과되면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고 국회에 가도 논란이 상당할 것이다"라며 유보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는 공범이 허위진술을 할 우려가 있고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에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김 총리는 "검찰과 법무부가 좋은 취지로 추진했지만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숙려 기간을 갖고 검토해 통과시켜도 늦지 않을 것 같다"며 개정안 심의를 유보키로 결정했다. /연합뉴스